

## 과학기술 민주화 기획으로서의 합의회의 : 한국의 경험

이영희 (가톨릭대)

### I. 머리말

최근 과학기술 이슈에 대한 공공참여의 한 형태로 합의회의(consensus conference)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합의회의는 “선별된 일단의 보통 시민들이(통상 15명 내외)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논쟁적이거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과학적, 혹은 기술적 주제에 대해 전문가들에게 질의하고 그에 대한 전문가들의 대답을 청취한 다음 이 주제에 대한 내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들의 견해를 발표하는 하나의 포럼”이라고 정의된다(Joss & Durant, 1995).

통상적으로 과학기술정책의 결정과정에 대한 참여가 과학기술 엘리트들로 국한되는 것에 비해, 합의회의는 사회 각 분야에 있는 다양한 보통 시민들이 특정 과학기술 이슈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과의 조직화된 토론을 통해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들의 정리된 의견을 보고서로 제출하여 정책결정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학기술 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참여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원래 1970년대에 미국에서 의료기술영향평가의 한 방법으로 고안되었던 합의회의는 1980년대 중반에 들어와 과학기술(정책)의 형성과정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제도화시키는 유력한 메카니즘으로 유럽에서 발전하게 되었다. 특히 1987년에 처음 열린 일반 시민 중심의 합의회의가 성공을 거두면서 덴마크에서는 지금까지 매년 1-2차례씩 과학기술과 관련된 여러 주제들에 대해 합의회의를 개최해 왔다. 덴마크의 성공 사례가 알려지자 1990년대 초에는 네덜란드와 영국에서 덴마크식 합의회의의 모델을 도입했고, 1990년대 후반부터는 유럽의 다른 국가들뿐 아니라 북미, 호주, 아시아 국가들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로 확산되는 추세이다. 한국에서도 지난 10년 동안 전국적인 주제를 대상으로 한 합의회의가 세 차례 개최되었다.

그런데 한국에서 개최된 합의회의의 경험들을 다른 나라들에서 개최된 합의회의의 경험들과 뚜렷하게 차별화시키는 것 중의 하나는, 한국의 합의회의들은 모두 시민단체에 의해 조직되었다는 점이다. 다른 나라들을 보면 대부분 의회나 행정부, 혹은 연구

기관이 합의회의를 주관해 왔다. 동아시아에 국한해서 보면, 일본은 2000년에 농림수산성 산하의 정부기관이 유전자변형작물에 대한 합의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sup>1)</sup> 대만 역시 최근 정부가 합의회의의 확산에 막대한 지원을 제공하여 불과 3-4년 사이에 20회 이상 합의회의가 개최될 정도로 합의회의가 널리 확산되고 있다.

그럼 왜 이처럼 유럽이나 미국, 호주, 일본, 대만 등과는 달리 유독 한국의 경우에는 합의회의가 시민단체의 주도로 개최되게 되었을까? 이 논문은 한국에서 시민단체가 합의회의를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은 과학기술 민주화를 기치로 내건 시민단체가 한국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이 시민단체가 합의회의를 과학기술 민주화의 유력한 수단으로 선택하고, 그것의 사회적 실천을 위해 노력했던 결과였다고 본다. 이와 함께 이 글은 이처럼 과학기술의 민주화를 기치로 내건 시민단체에 의해 조직된 한국의 합의회의가 과연 과학기술의 민주화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성공했는가는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여러 측면에서 탐색해본다.

## 2. 한국의 과학기술 정책레짐과 과학기술 민주화운동

여기에서는 먼저 한국에서 합의회의가 시민단체 주도로 실행될 수 있었던 배경으로 한국의 과학기술 정책레짐의 특징과 그에 대응하여 출현한 과학기술 민주화운동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과학기술 정책레짐

한국은 지난 40년간 독특한 과학기술 정책레짐<sup>2)</sup>을 형성해 왔다. 그것의 핵심은 성장지상주의와 권위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둘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결합되어

- 
- 1) 일본에서는 이미 1998년 초에 합의회의가 개최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 와카마쓰 교수에 의해 조직된 합의회의는 전국적 행사가 아니라 지역적 행사였고, 다분히 연구자로서의 학문적 관심에서 출발한 실험적 성격을 지니는 것이었다.
  - 2) 정책레짐이란 "어떤 주어진 정책의제영역에 있어서 정책결정을 둘러싼 참여자들간에 근사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암묵적 혹은 명시적인 원리, 규범, 규칙, 그리고 의사결정절차들의 집합"으로 정의되기도 하고(김정수, 1996), "정책의 기본적 틀 내지는 구조와 내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책을 주도하는 특정의 가치와 이념, 이를 이론화하고 체계화하는 독트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정책수단들, 이 정책이 가져오는 정치적 사회적 결과 등의 요소들을 포함한다"고 정의되기도 한다(최장집, 2005). 어쨌든 개별 정책이 가변적이고 한시적이라면, 정책레짐은 개별 정책의 방향과 특징을 규정하는 거시적인 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정책레짐은 개별 정책에 비해 상당히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있다. 먼저 성장지상주의 정책레짐의 형성과정을 살펴보자.

한국에서 과학기술정책이 나름대로 체계를 가지고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부터이다. 1960년대에 들어와 당시 박정희 군사정부는 공업화를 통한 산업의 근대화를 기본목표로 하고 과학기술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법을 제정하고 전문연구 기관을 설립하였으며 또한 국가의 과학기술정책을 종합하고 조정하는 정부부처(과학기술처)를 발족시키면서 과학기술정책의 틀을 어느 정도 잡게 되었다. 이 모든 제도적 하부구조는 당시 박정희 정권이 소리 높여 내세운, 산업화를 통한 '조국근대화'의 달성을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 신설된 과학기술처는 당시 군사정부가 추진하던 경제성장정책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과학기술정책이란 과학기술의 산업화를 통한 국가 경제성장예의 기여를 그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었다. 이러한 성장지상주의적 기조는 이후에도 계속되어 정부의 과학기술투자가 기초과학이나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술(보건기술, 재난방지기술, 환경기술 등)에 비해 산업적 응용가능성과 시장잠재력을 가진, 다시 말해 '돈이 되는' 과학기술 쪽으로 압도적으로 많이 기울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상에서 짧게 일별한 한국의 과학기술정책은 처음부터 '발전국가'의 경제발전계획에 종속되어 추진되어왔다는 데 그 특성이 있다. 그러다 보니 과학기술의 개발과 공급을 통한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생산성 향상이 언제나 정책입안자들의 가장 중심적인 전략적 목표가 되어왔던 것이다. 다시 말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개발함에 있어 오로지 경제성장예의 기여라는 경제적인 가치만을 우선시했던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성장지상주의는 자연스럽게 권위주의와 결합하게 되었다. 효율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성장지상주의와 폐쇄적 의사결정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권위주의 사이에는 매우 높은 친화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성장지상주의가 과학기술 정책레짐이 추구하는 목표 혹은 지향점을 지칭하는 개념이라면, 권위주의는 그러한 목표나 지향점이 실행되는 방식 혹은 스타일을 가리킨다. 여기서 권위주의란 시민사회에 대한 과학기술 파워엘리트들(과학기술자와 관료)의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권위주의는 과학기술 파워엘리트들만이 과학기술정책 형성과정을 독점할 수 있다고 보는 사고방식이다. 이러한 권위주의에 따르면, 비록 자신들의 삶에 막중한 영향을 미치는 과학기술정책이라고 해도 시민사회예의 주요 구성원들인 일반 시민은 정책결정과정으로부터 배제되어야 한다. 과학기술지식이 결핍되어 있는 일반 시민은 오로지 과학기술이 중요하다는 점을 전문가들로부터 계몽을 통해 배워야 하는 피동적인 존재로 여겨질 따름이다. 이처럼 폐쇄적 권위주의는 다른 사회 분야와는 달리 과학기술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잘 훈련된 전문가들만이 의사결정과정예에 대한 참여자격을 부여받는다는 전문가주의 논리에 의해 정당화되곤 하였다.

1960년대부터 틀을 잡기 시작한 이러한 성장지상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과학기술 정책레짐의 기초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즉 지난 40년 동안 정권의 교체와 민주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의 도구로 과학기술을 바라보는 성장지상주의적 과학기술정책관과 권위주의적 정책결정 방식은 의연히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 과학기술의 민주화를 목표로 내건 시민운동이 1990년대 후반에 들어와 등장하게 된 데는 이러한 과학기술 정책레짐의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제고되었기 때문이다.

## 2) 과학기술 민주화운동의 전개과정

한국에서 과학기술을 주요 활동영역으로 삼는 과학기술운동의 담론은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다. 당시에 주로 급진적 학생운동의 세례를 받고 탄생한 과학기술운동 담론은 반자본주의적 변혁운동의 일환으로서 '민중과학', 즉 지배계급에 봉사하는 과학을 거부하고 피지배계급인 민중을 위한 과학을 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민중과학론에 입각한 이러한 과학기술운동 담론은 아직은 일부 대학 내의 소수의 학생들에 의한 탐색적 수준을 크게 벗어나는 것이 아니었다. 1980년대 중반에 들어와서는 이 민중과학론과 함께 과학기술자도 노동자이므로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운동을 펼쳐야 한다는 과학기술 노동운동 담론이 확산되기도 하였다.<sup>3)</sup> 그러나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여전히 과학기술운동은 '민중을 위한 과학'이라는 담론에 크게 의지하고 있었고, 소수의 지식인들만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었다.<sup>4)</sup>

그러다가 한국에서 명시적으로 '과학기술의 민주화'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1990년대 중반쯤에 이르러서였다. 1997년 11월에 참여연대 산하에 '과학기술민주화를위한모임'(이하 과민모)이라는 이름으로 발족한 과학기술 시민단체(후에 '시민과학센터'로 개칭)가 아마도 과학기술의 민주화 개념을 한국 사회에 본격적으로 제기한 최초의 시민단체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과민모는 한국 사회가 성장주의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비성찰적 근대화의 망령에서 벗어나 사회를 민주화하려면 먼저 근대화의 핵심인 과학기술부터 민주화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보고, 시민의 관점에서 과학기술 활동을 감시하고 과학기술 의사결정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과학기술의 민주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과학기술민주화를위한모임, 1999). 요컨대 과학기술의 민

3) 한국 과학기술운동의 흐름에 대한 개괄로는 박진희(2004)를 참고할 것.

4) 1990년대 초반에는 한국과학기술청년회와 경실련 과학기술위원회 등의 과학기술 시민단체들이 설립되기도 했는데 이들은 '민중과학론'을 명시적으로 따르지는 않았고 그렇다고 시민참여를 통한 과학기술 민주화를 내걸지도 않았다. 이들은 시민참여보다는 주로 과학기술자의 참여와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감을 강조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었다. 이영희(1998) 참고.

주화란 무엇보다도 기존의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과학기술 정책레짐을 시민참여를 통해 해체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바야흐로 과민모의 출범과 더불어 이제 한국사회의 과학기술운동의 담론이 '민중을 위한 과학'에서 '시민참여과학'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이러한 운동담론의 변화를 가져온 배경으로는 1980년대 말 동구권의 몰락으로 인한 사회주의 이념의 퇴조와 더불어 한국에서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정치적 민주화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당시 한국사회에서 진전되던 정치적 민주화의 결과 사회의 많은 부분에서 이전의 권위주의적이고 엘리트주의적인 의사결정체제가 보다 참여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체제로 바뀌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정치문화의 변화는 과학기술의 민주화를 추구하는 시민단체의 탄생을 가져온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처럼 민주적 이행기를 경험하고 있던 한국의 정치사회적 맥락에서 탄생한 과민모가 그 전의 급진적이지만 다소 관념적인 거대담론이었던 민중과학론 대신에 시민참여를 통한 과학기술의 민주화라는 어느 정도 실천 가능한 프로젝트를 운동의 핵심적 목표로 내세우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시대적 귀결이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다.

과민모는 출범 이후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시민적 관점에서의 감시와 아울러 주로 서구 사회에서 개발되었던 과학기술 관련 시민참여 모델들을 연구하고 한국사회에 보급하는 데 앞장서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초기 과민모의 핵심 멤버들은 과학기술 정책 감시라는 일상적인 활동과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과학기술을 민주화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참여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참여의 필요성과 시민참여의 방식 등을 알려나갔다. 과민모는 한국의 과학기술 정책레짐이 지니고 있는 지나친 성장지상주의적, 권위주의적 성격을 비판하고 사회구성원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과학기술 관련 의사결정과정의 시민들에게 개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과민모의 출범은 민중과학론에 입각해 자본주의구조라는 보다 거대한 구조의 변화를 추구했던 그 전의 과학기술운동과는 달리 성장지상주의와 권위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한국의 과학기술 정책레짐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목표물에 대한 도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과민모는 특히 서구의 과학기술학 분야에서 발전된 '기술적 시민권(technological citizenship)', '시민적 지식(lay knowledge)' 등의 개념들을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참가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였다.<sup>5)</sup> 기술적 시민권이란 전통적 시민권 개념과는 달리 과학기술이 사회구성원들의 삶에 점점 더 중요해지는 과학기술시대에는 과학기술에 대한 민

5) 이는 과민모에서 활동하던 주요 인사들이 대부분 과학기술학 연구자들이기도 했다는 점과도 관련된다.

주적 통제를 위한 시민참여의 권리가 새로운 시민권 개념으로 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Frankenfeld, 1992; Zimmerman, 1995). 시민적 지식이란 공식 교육훈련 등을 통해 획득되는 전문가 지식(expert knowledge)과는 달리 일반 시민들이 삶의 경험 속에서 암묵적 형태로 축적하는 지식을 의미하는데, 종종 과학기술적 문제해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Wynne, 1991). 시민적 지식도 전문가 지식과 함께 과학기술적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은 과학기술적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치부되는 일반 시민들도 과학기술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지식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요컨대 기술적 시민권 개념이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참여의 당위성 또는 정당성 주장을 강화하는 데 활용될 수 있었다면, 시민적 지식 개념은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참여의 가능성 또는 효과성 주장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었다.

과민모는 이상과 같은 시민참여론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민참여 방법들을 발굴하여 자체적으로 학습하고 그것을 다시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주력하게 된다. 과민모가 출범한 다음 해인 1998년에 한국에서 최초로 합의회의가 개최될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참여를 강조했던 과민모 활동이 사회적으로 일정한 성과를 거두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sup>6)</sup>

### 3. 한국에서 합의회의의 전개과정

한국에서 전국 단위의 합의회의는 지금까지 세 차례 개최되었다. 각각의 내용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sup>7)</sup>

#### 1) 1998년 유전자조작식품 합의회의

1998년 11월에 한국 최초의 합의회의가 “유전자조작 식품의 안전과 생명윤리”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이 합의회의는 공식적으로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주최한 것이

---

6) 과민모는 이미 1997년 8월 10일에 발표한 “과학기술 시민운동을 제안하며...”라는 제목의 취지문에서 기술영향평가(technology assessment), 합의회의, 과학상점, 신기술협약 및 참여설계 등을 과학기술의 민주화를 위한 제도로 제시하고 있었다.

7) 이 세 번의 합의회의 외에도 2003년에 서울대 총학생회와 대학본부가 “서울대 학생중의 미래”를 주제로 합의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서울대 합의회의는 전국적 차원의 행사가 아니라 학교 내 행사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외하였다. 서울대 합의회의에 대한 내용은 이종민(2003) 참고.

었지만 합의회의의 방식의 행사를 추진하자는 초기 제안에서부터 구체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이르기까지 실제적인 역할은 과민모가 수행하였다.

당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1997년 유네스코 정기총회에서 채택된 '인간개놈과 인권에 관한 보편선언'에 근거한 생명윤리 논의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로 결정하고 그 구체적인 사업방식을 구상하기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는데, 거기에 초청된 과민모의 대표가 합의회의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고 결국 그 제안이 채택되었던 것이다(김환석, 1999). 물론 당시 합의회의를 제안했던 과민모의 대표는, 과민모가 직접 합의회의를 추진하기에는 아직 출범한지 1년밖에 되지 않은 관계로 인적, 재정적으로 취약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원이 풍부하고 시민참여 방식의 사업개념에 대해 우호적이었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를 통해 과민모가 추구하던 과학기술 민주화를 위한 한 제도로서 합의회의를 한국사회에 알리고자 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합의회의를 제안한 과민모 대표는 합의회의의 프로젝트 책임자로 임명되어 합의회의의 전 과정을 지휘하게 되었다.

합의회의의 책임자는 먼저 합의회의의 중립적이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합의회의의 전체 과정을 점검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조정위원회를 생명공학계, 인문사회계, 시민사회단체, 언론계 인사들로 구성하였다. 조정위원회는 합의회의의 주제 확정, 시민패널 선정, 전문가패널 추천, 합의회의의 일정 확정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1998년 7월부터 신문, 방송, PC통신망 등을 통해 시민패널을 공개 모집한 결과 40여 명이 신청을 하였고, 나이, 성, 직업 등을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15명을 시민패널로 선정하였다.<sup>8)</sup> 시민패널의 직업은 농민, 가정주부, 공무원, 고교교사, 대학생, 잡지사 기자 등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이렇게 선발된 시민패널은 주최 측으로부터 합의회의의 주제와 관련된 기초 교양자료를 배부 받고 9월과 10월에 각각 한 번씩 열린 예비모임을 통해 전문가들로부터 유전자조작 식품에 대한 기초지식을 교육받았다. 합의회의의 본 행사는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에 소재한 한 대학 건물에서 공개적으로 개최되었다. 본 회의의 첫째 날과 둘째 날에는 시민패널이 제기한 질문들에 대해 14명의 전문가패널이 주제발표를 하였고, 이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sup>9)</sup> 마지막 날에는 시민패널이 밤새 작성한 최종보고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시민패널의 최종보고서는 과학자들이 유전자조작 기술의 발달에 따른 자연에 대한 통제력을 과신하기에 앞서 유전자조작 기술의 잠재적 위험성을 인식하고, 유전자조작 식품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유전자조작 여부에 대한 '표시제'를 도입해야 한

8) 이중 1명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후 회의에 불참하여 최종 시민패널은 14명이 되었다.

9) 시민패널이 제기한 주요 질문은, 유전자조작 식품의 정의 및 필요성 여부, 유전자조작 식품이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유전자조작 식품을 둘러싼 정치경제적 이해관계, 유전자조작 식품의 안전에 관한 바람직한 규제방향 등이었다.

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8). 이 최종보고서는 국회의원, 공무원, 연구기관,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발송되었다(한재각, 2006).

## 2) 1999년 생명복제기술 합의회

한국에서 두 번째 합의회는 1999년 9월에 “생명복제기술”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이 두 번째 합의회 역시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의해 개최되었지만, 이번 합의회에서도 1998년 합의회 책임자를 맡았던 과민모 대표가 책임을 맡는 등 그 진행과정에서 과민모가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1997년 초 복제양 돌리의 탄생이 알려지면서 인간복제의 가능성이 논의되는 등 생명복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주최 기관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생명윤리 관련 사업의 일환으로 합의회를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이 생명복제기술을 주제로 선정하게 된 이유였다. 합의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과민모 역시 당시 주요 활동 방향을 생명공학 감시에 두고 있었던 점도 생명복제기술이 합의회 주제로 선정되게 된 이유 중의 하나였다.

먼저 합의회 운영 전반을 감독할 조정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생명과학자, 윤리학자, 시민단체 인사, 국책연구기관 인사, 과학기자 등이 조정위원으로 참여하였다. 한편 1998년과 마찬가지로 신문과 방송, PC통신망 등에 시민패널 모집공고를 낸 결과 전국 각지에서 88명이 신청하였다. 지원자는 20대 대학생이 가장 많았다. 이 중 남녀 각각 8명 총 16명이 시민패널로 선정되었다. 시민패널의 직업은 대학생, 사회단체 활동가, 수의사, 시의원, 고교교사, 가정주부, 자영업 등 다양하였다. 시민패널은 미리 관련 정보를 문서로 제공받고, 본 회의 전인 7월과 8월에는 예비모임에 참석하여 생명복제기술에 대한 기초지식을 교육받았다.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서울의 한 대학에서 공개적으로 열린 본 회의에서 시민패널이 제기한 10개의 주요 질문과 35개의 세부 질문에 11명의 전문가들이 답변을 하였고, 답변에 대한 질의응답이 다시 이어졌다.<sup>10)</sup> 이후 시민패널은 자체 토의시간을 갖고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최종보고서의 결론은 현 단계에서 체세포복제기술을 이용한 인간복제 시도는 물론이고 인간 배아복제도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보고서는 생명복제기술과 관련하여 시민참여의 필요성과 생명윤리 의식향상을 위한 학교교육과 시민교육이 강화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9). 이 최종보고서의 내용은 본 회의 마지막 날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되었고, 시민패널은 기자회견 이후 국가

<sup>10)</sup> 시민패널이 제기한 주요 질문은, 생명복제기술의 이점과 문제점, 생명복제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생명복제기술에 대한 국내외 규제동향 등이었다.



과학기술자문회의, 국회, 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과학기자클럽, 관련 학회, 시민단체 등에 이 보고서를 전달하고 시민패널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김은영, 2006).

### 3) 2004년 전력정책 합의회의

한국에서의 세 번째 전국단위 합의회의는 2004년 10월에 시민과학센터의 주최로 열렸는데, 재정지원은 한국과학문화재단으로부터 받았다. 시민과학센터는 첫 번째와 두 번째의 합의회의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과민모의 새로운 이름이다.

시민과학센터는 세 번째 합의회의의 주제로 “원자력 중심의 전력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선정했다. 원자력 중심의 전력정책이 주제로 선정된 배경에는 방사성폐기물처리장(방폐장) 부지선정과 관련하여 한국사회가 거의 20년 가까이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던 사정이 존재한다. 특히 2003년도에 방폐장 부지선정 문제로 부안에서 일어났던 엄청난 소요사태는 시민과학센터로 하여금 원자력 중심의 전력정책의 미래를 합의회의의 주제로 선정하게 한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하였다. 방폐장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매우 위험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상황에서 국가의 향후 바람직한 전력정책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시민과학센터는 판단한 것이다. 국내 총 전력생산 중에서 원자력발전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달하는 상황에서 근본적으로 원자력을 중심으로 하는 전력정책의 지속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방폐장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해결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먼저 합의회의의 운영을 감독할 조정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원자력계 인사, 환경단체 활동가, 기자, 관련부처 공무원, 시민참여 전문가 등이 조정위원으로 참여하였다. 그런데 다루는 주제의 뜨거운 성격을 반영이라도 하듯 대체로 조정위원들의 참여도는 앞의 두 번의 합의회의의 때보다는 훨씬 높았다. 시민패널은 종이신문(한겨레신문, 동아일보)과 인터넷신문(프레시안) 등을 통해 모집하였는데, 전국에서 176명이 참가신청을 하였다. 인구통계적 균형성을 고려해 이들 중 18명이 최종적인 시민패널로 선정되었는데,<sup>11)</sup> 이들은 20대에서 70대까지의 연령층으로 직업은 퇴직 교사, 가정주부, 대학생, 회사원, 농업기술자 등 다양하였다(김병수, 2006).

시민패널은 관련 정보들을 문서로 제공받은 다음 7월과 9월에 두 차례에 걸쳐 예비모임을 갖고 해당 주제에 대한 기초 지식을 교육받았다.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소재의 한 대학에서 공개적으로 열린 본 회의는 시민패널이 미리 작성한 질문들에 대해 11명의 전문가패널과 2명의 원자력발전소 부근 주민의 발표를 듣고, 이에 대해

11) 이들 중 합의회의의 전 과정에 참석한 사람은 16명이었다.

시민패널이 다시 질의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sup>12)</sup> 시민패널은 본 회의 둘째 날 밤부터 본격적으로 자체 토론에 들어갔다. 주요 쟁점인 원자력 발전 지속여부에 대해서는 조별 토론 및 전체 토론 후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나갔다. 시민패널은 한국 전력정책의 문제점으로 공급위주 정책으로 인한 원자력에 대한 종속 심화, 전력정책 결정과정의 폐쇄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개발 노력 부족 등을 들고, 원자력발전소의 신규건설을 중단해야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시민패널은 수요관리 시스템의 정비, 전원구성의 다양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시민과학센터, 2004). 본 회의 마지막 날 앞의 내용이 담긴 시민패널의 최종보고서는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되었고, 이 최종보고서는 국회와 행정기관, 연구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관련 기관과 인사들에게 보내졌다.

#### 4. 토론: 한국 합의회의의 특징과 평가

지금까지 한국에서 세 차례에 걸쳐 열렸던 합의회의를 살펴보았다. 앞에서 간략하게 언급하였듯이 다른 나라들과 구별되는 한국 합의회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합의회의의 아이디어가 과학기술의 민주화를 운동 목표로 내건 시민단체에 의해 제시되었고, 합의회의의 행사 자체도 실질적으로 그 단체에 의해 운영되었다는 점이다. 1980년대 중후반 덴마크에서 최초의 합의회의가 개최된 이래 지금까지 많은 나라들에서 합의회의가 수십 차례나 개최되었지만 대부분 의회나 행정부, 혹은 연구기관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한국의 합의회의는 매우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13)</sup>

유독 한국에서 합의회의가 시민단체에 의해 주도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이

12) 시민패널이 제기한 주요 질문은, 전력문제를 고려할 때의 중요한 가치기준, 전력정책의 현황과 바람직한 방향, 원자력발전과 관련한 국내외 동향과 산업적 이해관계, 원자력발전의 지속여부, 원자력발전의 대안, 전력정책 수립시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의사결정구조 등이었다.

13) 엄밀하게 말하면 한국 말고도 합의회의를 조직하는 데 시민단체가 참여한 예는 약간 있다. 1997년에 미국 보스턴 지역에서 열린 “텔레커뮤니케이션과 민주주의의 미래”라는 주제의 합의회의를 조직하는 데도 Loka Institute라는 시민단체가 참여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의 합의회의는 Loka Institute와 대학을 비롯한 다양한 기관들이 공동으로 조직하는 형태를 취하였기 때문에 순전히 시민단체에 의해 조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Guston(1999) 참고 1999년에 “유전자조작 식품”을 주제로 열렸던 캐나다의 합의회의도 미국처럼 대학이 시민단체의 협력을 받아 진행하였다. Einsiedel, Jelsøe, & Breck(2001) 참고 한편 1999년에 “식품에서의 유전자기술”을 주제로 합의회의가 열렸던 호주의 경우에도 호주소비자연맹이 합의회의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합의회의를 성사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였지만 실제적인 운영은 호주박물관이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한국과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Mohr(2002) 참고.

에 대한 답은 두 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다른 나라들의 경우 합의회의의 주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던 행정부나 의회가 한국의 경우에는 아직 시민참여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민주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장지상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과학기술 정책레짐이 유지되고 있고, 그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받아본 적이 없는 한국의 행정부나 의회가 스스로 나서서 합의회의와 같은 시민참여 방식을 실천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 합의회의를 확산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시민단체인 시민과학센터(구 과민모)는 합의회의를 과학기술의 민주화를 촉진하기 위한 한 수단으로 여겼다. 시민과학센터의 핵심 구성원들은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당시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던 과학기술과 관련한 시민참여 모델들을 연구하고 있었고, 다양한 시민참여 모델들 중에서도 특히 합의회의를 참여적 기술영향평가(participatory technology assessment)<sup>14)</sup>를 통한 과학기술 민주화의 한 경로로 인식하고 있던 차에 기회가 닿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를 설득하여 합의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한마디로 시민과학센터는 과학기술의 민주화를 위한 기획으로서 합의회의를 전략적으로 추진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합의회의는 '시민사회 주도형'이라고 이름붙일 수 있겠다.

그럼 이제 세 차례에 걸쳐 열렸던 한국의 합의회의에 대한 평가를 시도할 차례이다. 그런데 평가란 항상 기준의 문제를 제기한다. 즉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평가 결과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합의회의에 대해서도 이미 국내외적으로 비교적 많은 평가 논문들이 나와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평가 논문들은 합의회의의 절차의 민주성, 투명성, 숙의성 정도, 그리고 합의회의의 결과의 정책영향력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합의회의가 얼마나 민주적으로 운영되었고,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되었고, 시민패널이 숙의과정에 얼마나 밀도 있게 참여하였는가, 그리고 합의회의를 통해 나온 시민패널의 최종보고서는 해당 주제와 관련된 공공정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가 등이 대체적으로 합의회의를 평가할 때 자주 활용되는 기준들이다.<sup>15)</sup>

이러한 기준들에 입각한 평가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미 이러한 기준들을 부분적이거나 활용한 평가 논문도 일부 발표된 바 있고(김만수, 2000; 김두환, 2000), 또 이 논문에서는 합의회의를 과학기술 민주화를 위한 기획이라고 보는 입장에서 출발하고 있

14) 기술영향평가란 기술의 도입과 활용이 가져올 수 있는 사회문화적, 정치경제적, 환경적 영향들을 미리 파악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정책적 시도를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기술영향평가 작업은 관련 전문가들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반해, 이해당사자로서 일반 시민들이 이러한 평가과정에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는 것이 참여적 기술영향평가이다. 참여적 기술영향평가의 다양한 형태들에 대해서는 Joss & Bellucci(2002)를 참고할 것.

15) 합의회의를 평가하는 논문들은 매우 많다. 대표적인 국내외적인 평가 논문들을 일부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김환석(1999), 김두환(2000), 김만수(2000), 김명진, 이영희(2002), Joss & Durant(1995), Einsiedel & Eastlick(2000), Goven(2003), Nishizawa(2005), Seifert(2006).

으므로 과연 세 번의 합의회의가 과학기술의 민주화 측면에서는 어떻게 평가될 수 있을까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사실 과학기술 민주화 기획으로 출발한 합의회의가 실제로 과학기술의 민주화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뒀는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과학기술 민주화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간접적인 지표들을 통해 그 성과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먼저 과학기술 이슈에 대한 시민참여 제도로서 합의회의의 개념이 언론을 통해 널리 소개될 수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합의회의가 실행되기 전에는 과학기술과 같은 전문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시민참여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설 자리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합의회의를 언론매체들이 보도하면서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참여, 그리고 과학기술 민주화의 의미와 중요성이 홍보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었다. 1998년도의 유전자조작식품 합의회의는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매일경제신문, 서울경제신문, 교수신문, 시민의 신문 등 많은 전국단위의 신문매체와 라디오 매체를 통해 보도되었고, 1999년도 생명복제기술 합의회의는 한겨레신문, 중앙일보, 조선일보, 국민일보, 동아일보, 시사저널 등의 전국단위의 신문과 잡지 그리고 라디오와 TV에서 다뤄졌다. 특히 한겨레신문은 합의회의를 1면 머릿기사와 사설 및 3회에 걸친 특집기사에서 다룸으로써 합의회의의 개념을 한국사회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아울러 2004년도 전력정책 합의회의도 한겨레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프레시안(인터넷신문), 연합뉴스 등 전국단위의 신문매체를 통해 보도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세 번에 걸친 합의회의는 언론을 주목을 끌어내는 데 비교적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비교적 많은 수의 전국단위 언론매체들이 합의회의의 행사와, 당시로서는 생소하던 합의회의의 의미를 다뤘기 때문이다. 합의회의의 행사가 언론의 조명을 받는다는 것은 합의회의가 내걸고 있는 과학기술 민주화 개념이 간접적이거나 사회적으로 확산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차 합의회의 개최 직전에 “과학민주화 앞당길 시민참여의 새 장”이라는 제목으로 합의회의를 소개했던 교수신문이 여기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교수신문, 1997년 7월 13일자).

두 번째로는 합의회의의 개최 이후 합의회의의 모델이 정부에 의해 어느 정도 수용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005년 5월에 들어와 대통령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그 한 예이다. 이 법안은 한국사회에서 분출되고 있는 사회갈등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관리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꼭 과학기술 이슈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안 제15조에서는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을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은 합의회의와 같이 일반시민이 중심이 되는 시민참여방법을 의미한다. 비록 이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에 있기는 하지만 법률안에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이 명시되어 있다는 것은 시민단체가 주도했던 합의회의가 정부 일각에 의해 그 공식성을 인정받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과학기술부는 2001년 7월에 발효된 <과학기술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술영향평가를 산하 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을 통해 2003년도부터 실시해 왔는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2006년도부터는 전문가들이 수행하는 기술영향평가와 더불어 시민참여적 기술영향평기도 병행하겠다고 선언하고 시민참여적 기술영향평가의 방법으로 2006년도에는 일부 변형된 형태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합의회의 모델을 근간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처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시민참여적 기술영향평가와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합의회의 모델을 수용하게 된 것은 시민과학센터를 비롯한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존의 기술영향평가가 지나치게 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비판하면서 시민참여적 기술영향평가의 수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노력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스스로 그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이 합의회의에 기반한 시민참여적 기술영향평가를 얼마나 내실 있게 수행하게 될지는 아직은 미지수이다. 아마도 정부는 어쩔 수 없어 시민사회로부터 강력하게 제기되는 참여의 요구를 형식적으로는 일부 수용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과정과 결과를 왜곡하고자 할지도 모른다. 이처럼 현실적으로 볼 때 많은 한계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정부가 추진하는 기술영향평가의 한 방법으로 합의회의가 수용된 것은 시민참여를 통한 과학기술의 민주화 달성이라는 시민사회 일각의 이념이 부분적이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시민단체에 의해 과학기술 민주화 기획으로 추진되었던 세 차례의 합의회의에 대해 부분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인 정책영향력이라는 점에서 평가해 본다면 아주 부정적인 결과가 도출된다. 물론 합의회의가 실제 정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가를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정책에 대한 영향은 간접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고,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의회나 행정부에 의해 추진되는 합의회의의 결과의 정책영향력은 불균등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음에 비해(김명진, 이영희, 2002), 한국에서 시민과학센터(과민모)에 의해 조직되었던 세 차례의 합의회의의 결과의 정책영향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시민단체는 법적으로는 임의단체에 불과하므로 이들에 의해 조직된 합의회의의 결과는, 그 결과가 사회적으로 크게 관심을 끌지 않는 한 대체로 정책결정자들에 의해 쉽게 무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sup>16)</sup> 아마도 이 점이 시민단체가 합

16) 아울러 통상적으로 합의회의에 참여하는 시민패널의 수가 15명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도 합

의회의를 주도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큰 한계점일 것이다. 왜냐하면 합의회의를 단지 시민들의 과학기술 교양 향상을 위한 계몽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과학기술의 민주화를 위한 기획으로 여긴다면 일반 시민들의 정책적 논의과정에서의 참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하여 심사숙고 끝에 내린 최종 결론의 정책영향력 정도가 바로 과학기술 민주화의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합의회의는 과학기술의 민주화와 관련하여 중립성의 딜레마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중립성의 딜레마란, 합의회의는 주관 기관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 시민패널, 전문가패널 등의 구성을 비롯한 합의회의의 진행의 전 과정에서 그 어떤 특정한 가치나 입장을 견지해서는 안 되고 엄격하게 중립적인 위치에 서 있도록 요구하는데, 그러한 중립성 요구에 따른 중립적 운영을 통해 나온 합의회의의 결과는 그 합의회의를 주관한 시민단체의 본래 입장과는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예컨대 만약 생명복제라는 주제에 대해 과학기술 민주화의 관점에서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시민단체가 주관한 합의회의에서 시민패널이 내놓은 결론이 생명복제에 우호적인 것이라면 그 합의회의를 주관한 시민단체는 원래의 자신의 입장을 강조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시민패널의 결론을 무시할 수도 없는 난처한 딜레마 상황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과학기술 민주화란 기본적으로 소수의 관료와 전문가에 국한되어 있는 폐쇄적인 과학기술 관련 논의의 장을 이해당사자들인 일반 시민들에 개방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합의회의를 과학기술 민주화 기획으로 본다면 합의회의에서 나온 시민패널의 결론은 그 자체로 충분히 존중되어야 마땅한 것이지만, 합의회의를 주관한 시민단체에서 그 사안에 대해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율배반적인 상황이 도래할 수 있는 것이다.

다행히 한국에서 개최된 세 번의 합의회의는 모두 그 결론들이 주관기관의 그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원래 세 번의 합의회의를 실질적으로 주관했던 시민과학센터(과민모)는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유전자조작 식품의 안전성 문제, 생명복제기술의 윤리성 문제, 그리고 원자력 중심의 전력정책의 방향 문제 등의 주제들에 대해 정부나 사업자 측의 입장과는 다른 입장을 취하거나 혹은 비록 적극적으로 특정 입장을 취하지는 않더라도 정부나 사업자 측의 입장에 대해 비판적인 주위 시민단체들의 입장에 보다 친화적이었다. 그런데 이들 주제들에 대한 시민패널들의 결론들이 시민과학센터의 그러한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세 번의 합의회의를 주관한 시민과학센터는 특별히 중립성의 딜레마 상황을 심각하게 느끼지는 않

---

의회의의 결과가 정책결정자들에 의해 무시되는 이유가 되곤 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합의회의의 조직을 누가했느냐와 상관없이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이다.

았다.<sup>17)</sup>

그러나 합의회의가 시민단체에 의해 조직될 때 그러한 딜레마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딜레마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하면, 합의회의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는 주제에 대해 특정한 입장을 어느 정도라도 지니고 있는 시민단체는 합의회의를 조직하는 주체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과학기술 민주화를 위한 기획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하고 합의회의를 조직하는 시민단체가 특정한 입장을 지닐 경우 반대자들로부터 합의회의 운영의 중립성에 대해 의심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클뿐더러 시민패널의 결론에 대해서는 자신의 입장과 다를지라도 수용해야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처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한국의 경우 다른 나라들처럼 의회나 행정부 같은 사회적 행위자들이 나서지 않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시민단체가 합의회의를 주관하고 나서게 되었던 것이지만 원칙적으로 그다지 바람직한 것은 아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합의회의는 사회적으로 중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의회나 행정부, 학술기관 등에 의해 조직되고 그 결과 또한 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가질 때 과학기술 민주화를 위한 기획으로서의 본래의 의의를 달성하게 될 것이다.

---

<sup>17)</sup> 다만 시민패널의 결론에 불만을 품은 일부 조정위원과 전문가패널 및 시민패널이 합의회의가 시민단체에 의해 조직되었기 때문에 중립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사후적으로 제기한 경우는 있었다.

<참고문헌>

- Einsiedel, Edna. & Deborah Eastlick. 2000. "Consensus Conferences as Deliberative Democracy: A Communications Perspective," *Science Communication* 21:4.
- Einsiedel, Edna, JelsØe, Erling & Breck. 2001. "Publics at the Technology Table: The Consensus Conference in Denmark, Canada, and Australia," *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 10.
- Frankenfeld, P. 1992. "Technological Citizenship: A Normative Framework for Risk Studies," *Science, Technology, and Human Values* 17:4.
- Goven, Joanna. 2003. "Deploying the Consensus Conference in New Zealand: Democracy and De-problematization," *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 12.
- Guston, David. 1999. "Evaluating the First U.S. Consensus Conference: The Impact of the Citizens' Panel on Telecommunications and the Future of Democracy," *Science, Technology, and Human Values* 24:4.
- Joss, Simon & John Durant (eds.). 1995. *Public Participation in Science: The Role of Consensus Conference in Europe*. London: Science Museum.
- Joss, Simon & Sergio Bellucci (eds.). 2002. *Participatory Technology Assessment: European Perspectives*. London: Centre for the Study of Democracy.
- Mohr, Alison. 2002. "Of Being Seen To Do the Right Thing: Provisional Findings from the First Australian Consensus Conference on Gene Technology in the Food Chain," *Science and Public Policy* 29:1.
- Nishizawa, Mariko. 2005. "Citizen Deliberations on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ir Social Environments: Case Study on the Japanese Consensus Conference on GM Crops," *Science and Public Policy* 32:6.
- Seifert, Franz. 2006. "Local Steps in an International Career: A Danish-style Consensus Conference in Austria," *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 15.
- Wynne, Brian. 1991. "Knowledges in Context," *Science, Technology, and Human Values* 16:1.
- Zimmerman, A. 1995. "Toward a More Democratic Ethic of Technological Governance," *Science, Technology, and Human Values* 20:1.
- 과학기술민주화를위한모임. 1999. 『진보의 패러독스: 과학기술의 민주화를 위하여』 . 서울: 당대출판사.
- 김두환. 2000. "사회적 학습과정으로서 협력적 계획모델의 적용: 합의회의를 사례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만수. 2000. “대안적 정책결정모델로서 ‘합의회의’ 연구: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명진 · 이영희. 2002. “합의회의,” 참여연대시민과학센터 편. 『과학기술 · 환경 · 시민  
참여』. 서울: 한울아카데미.
- 김병수. 2006. “합의회의 국내사례들: 원자력 중심 전력정책,” <과학과 기술> 9월호
- 김은영. 2006. “합의회의 국내사례들: 생명복제기술,” <과학과 기술> 9월호
- 김정수. 1996. “정책레짐모델을 이용한 미국 통상정책의 제도적 변화분석,” <국제정치  
논총>.